

제9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

2021. 12. 2.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I . 추진배경	1
II . 주요 과제[요약]	3
III . 추진과제	4
1. 신산업 진출 활성화 기반 조성	4
2. 탄소중립 대비 지원	6
3. 기존 산업의 불편 · 애로사항 해소	9
IV . 향후 추진계획	11
[참고1] 과제별 추진일정	
[참고2] 과제별 부처 담당자	

I. 추진 배경

□ 혁신성장을 위해 현장중심적 규제혁신 노력 중

- 우리나라 규제혁신 전반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역대 최고 수준*이나, 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

* 매년말 국조실 의뢰로 전문기관(20년 알앤알컨설팅)에서 조사: ('15) 69.2 → ('20) 71.6

** (전경련) '21.6월 조사, 100점 기준(100=보통) 체감도에 92.1점

(경 총) '21.6월 조사, 100점 만점 만족도에 49.8점

- 규제혁신 가속화를 통해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한편, 주 정책대상인 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제고할 필요

- 규제입증책임제·규제샌드박스 등 근본적 규제혁신과 함께 지속적인 현장중심의 규제혁신을 통해 시장친화적 규제환경 조성

- 경제단체장 간담회*,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TF**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정책제언을 수렴

*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5단체장 간담회(2.2, 4.16, 8.11, 10.8)

** 중앙정부(기재부, 중기부)·지자체·민간(대한상의)로 구성·운영('21.1.22~)

□ 신산업 분야 및 탄소중립 실현 지원, 기존산업의 애로 해소 등 규제혁신 12건 추진

- 금번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IX」는 혁신성장을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과 기존산업의 애로 해소를 병행

- ① 신산업 진출 및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 지원 확대
- ②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예산·세제 지원
- ③ 기존 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 및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산업 현장의 다양한 기업 규제 개선·애로 해소 추진

□ [참고]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 ~Ⅷ 추진 성과

- '18.2월부터 총 8차례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발표
→ 총 270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후속조치 완료·추진중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주요 성과】

대책명	주요 내용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 (I) ('18.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경제분야 현장규제 개선, ②新서비스시장 활성화, ③행정규제·그림자규제 개선 등 50건 * 산림레포츠시설 동력기구 추가, 식품유통전문판매업 시설기준 명확화 등
현장밀착형 혁신성장 지원방안 (II) ('18.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신시장 창출 촉진, ②기업환경 개선, ③세제·예산지원 등 48건 * 스마트팜 혁신밸리 입지규제 개선, 신성장기술 R&D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III) (‘18.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기업애로 해소, ②소상공인 지원, ③진입·입지규제 개선 등 31건 * 퍼스널모빌리티 합리적 기준 마련, 일반음식점내 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 허용, 댄스스포츠 학원등록 허용 등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IV) (‘18.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신산업·창업 촉진, ②여가·레저 활성화, ③기존산업 애로 해소, ④행정절차 개선 등 37건 * 비금융회사 간편결제수단의 해외결제 허용, 새로운 수중레저기구 기준 마련, 중소기업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선 등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 (‘19.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시장진출입 활성화, ②신제품 개발 활성화, ③기능성 표시제 개선, ④마케팅 경쟁력 제고, ⑤신산업 분야 등 31건 * 대형마트·백화점 등의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 허용, 건강기능식품 원료범위를 일부 의약품성분까지 확대, 신기술 인증제품의 판로 확대 등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I) (‘19.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신산업·신기술 활성화, ②기업규제·애로 해소, ③행정절차 간소화·국민불편 해소, ④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33건 * 이동식 협동로봇 인증절차 명확화, 중투사의 해외계열사 신용공여 허용, 화학물질 관리규제 개선, 단일기업 전용산단내 협력사 입주 지원 등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방안 * 현장밀착형(VII) (‘20.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노동·환경 규제의 합리적 개선, ②신규업체 진입규제 완화, ③기업 비용·행정부담 완화 등 11건 * 특별연장근로제도 보완, 화학안전 패스트트랙 지원강화, 관광식당업 인적 요건 완화, 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경산4일반산단 필자규제 완화 등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III) (‘21.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코로나 19에 따라 가중된 기업부담 완화과제, ②기업환경 급변속 탄소중립, GVC 재편 등 미래대비 지원과제 29건 * 코로나19 자가 검사키트 허용, 기업인 해외출국시 백신접종 제도 보완, 탄소중립이행 지원,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 육성 지원 등

Ⅱ. 주요 과제(요약)

□ 신산업 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및 규제 정비, 가이드라인 마련 등 규제·애로사항 4건 해소 추진

- ① 사업재편 R&D 자금 대폭 확대*, 융자 전용 프로그램 신규 조성** 등을 통해 신산업 진출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21년 100억원 → '22년 180억원 ** '21년, 5,000억원

- ② 블록체인 기술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방법 관련 규정 개정 검토,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신기술 활용 제고 촉진

□ 탄소중립에 대비하기 위한 기업 지원 과제 4건 추진

- ① 탄소감축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친환경·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예산·세제지원 확대 등

- ②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용 및 「탄소중립기본법」에 지원 근거 마련 등

□ 기업현장의 불필요한 중복 규제, 경영상 어려움 등 불편·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 4건 개선 추진

- ① 환경시스템별 중복입력사항 해소, IoT 대기측정기기 설치시 적산전력계 설치의무 면제 등 불필요한 업무부담 축소

- ② 외국인 근로자 입국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Ⅲ. 추진과제

1 신산업 진출 활성화 기반 조성

① 신산업 진출 사업재편 승인기업 금융지원 확대

- (기존)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상황이나 니즈를 반영한 실질적 자금지원이나 금리 인하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 부족
- (개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추진 중
 - (R&D) 사업재편 R&D 자금을 대폭 확대('21년 100억원 → '22년 180억원)하여 사업재편 기업의 원활한 연구개발 지원 예정
 - (융자) 전용 프로그램 신규조성을 통해 사업구조 개편 기업의 설비투자·M&A 등 필요자금 적극 지원('21년, 5,000억원)
 - (P-CBO) 「코로나19 P-CBO」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한 P-CBO 보증 지원('21년, 1,000억원)
 - (사업재편펀드)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민간으로부터의 투자 확대 지원을 목적으로 전용펀드 조성('22년, 500억원)
- (효과) 금융지원 확대를 통한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 유도

②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 완화

- (기존)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는 일률적 기준 없이 개별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규제 중
 - 규제 내용이 지자체별로 상이하고, 일부는 과도하게 설정*되어 설비 투자시 협소한 입지, 높은 인구밀도, 지역주민 반발 등 제약
- * 도로·거주 지역 반경 50m~2km까지 다양하게 분포(태양광, '21.9월 기준)
- (개선) 적정 이격거리 수준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완료후 이를 기반으로 표준화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시 신재생법 개정 추진
- (효과)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촉진

③ 블록체인 기반 지분거래 플랫폼 서비스 규제 정비 추진

- (기존) 금융거래 정보는 거래완료 이후 일정시점(필수정보 5년)에 삭제 의무가 있으나 블록체인 기술은 자체 특성으로 인해 거래내역이 영구 보존돼 규정준수 불가
- (개선) 개인정보(+전자금융거래내역*)의 파기방법(개보법 시행령 §16)에 관한 규정을 기술 중립적인 방향으로 개정 검토
 - * 전자금융거래내역 파기방법은 개보법 시행령 §16 준용하도록 규정(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12)
 -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익명정보)로 처리를 허용
 - * 개보법§58의2(적용제외) "이 법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효과)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블록체인 산업 발전 촉진

④ 가명정보 활용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기존) 데이터 3법 시행에도 관련 가이드라인 등의 가명정보 활용 절차·기준이 원칙 중심으로 서술되어 가명정보 활용 저조
 - 기업들은 가이드라인에서의 결합 절차가 일률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가명정보의 효율적 활용에 제약을 느낌
- (개선)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결합절차의 다양화 도입, 세부적인 기준·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개정 예정('22.1분기)
 - 모의결합, 가명정보 추출, 결합률 확인 등 다양한 결합절차를 반영한 고시 및 가이드라인 개정(10월)
 - 가명정보 위험성 평가, 적정성 검토 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 마련을 위한 실증연구 수행(5월~10월) 및 가이드라인 개정('22.1분기)
- (효과) 가명정보 처리방식 및 절차 구체화를 통해 새로운 기술·제품 개발을 위한 과학적 연구 등에 가명정보 활용 제고

2

탄소중립 대비 지원

① 국가차원의 저탄소 기술개발 초기 연구지원

- (필요성) 기업현장에서 탄소저감을 위해 저탄소배출 소재·공법 등의 新기술 개발 필요
 - 지자체, 지역대학 등과 공동 협력할 수 있는 기반 조성 필요
 - (개선) 탄소감축 효과가 크고 현장에서 시급히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 계획
 - 규제자유특구, R&D특구를 통한 탄소중립기술 활용 확대* 및 실증·사업화 지원 강화** → 탄소중립 新기술 조기 상용화 촉진
- * 탄소중립 관련 규제자유특구 확대(21, 15개→25, 20개), R&D특구 실증규제특례 시행(21~)
- ** 규제특구챌린지(우수기업·창업팀 선발지원), R&D특구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등
- 출연연 100대 사업화 유망기술 발굴·육성* 및 R&D특구·대학의 역량을 활용한 지역·산업 연계 기술사업화** 촉진
- * 조기 사업화 가능한 출연연 보유기술 → 기술사업화를 위한 재정·인프라 지원(21~)
- ** 지역특구별 특화 R&D지원 신설(22~), 지역-대학 연계 난제해결R&D 추진
- 지역 에너지 환경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신사업을 진행하는 민간 컨소시엄*에 매칭 지원(국비·지방비 각 25% 이내, 민간 50% 이상)
- * 컨소시엄은 민간 법인사업자,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등으로 구성되며 지자체 참여 필수
- (효과) 탄소감축기술 R&D 지원 등을 통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

2 친환경·탄소중립 예산 및 세제지원 확대

- (필요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 혁신기술이 필수적이나, 개별기업에게는 높은 비용부담 및 중복투자 우려
- (개선) 정부 차원의 탄소중립 R&D 예산 확대 및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예산) '22년 탄소중립(그린뉴딜) R&D 예산(안)은 18,571억원으로, 금년(13,134억원) 대비 41.4% 이상 증가
 - 특히, 철강·시멘트·정유 등 탄소 多배출 업종의 공정효율화를 위한 신규 R&D 사업을 '22년부터 본격 추진 ('22년 724억원)
 - (세제) 현재 탄소중립 관련 기술(13개)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여 일반 R&D·시설투자 대비 우대 지원 중(시설투자는 10개)
 - * 단기 탄소저감 방법으로 활용중인 부생가스 전환기술 및 중장기 탄소중립 기술(CO₂포집·저장·활용기술 등) 등
 -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탄소 多배출 업종 주요 저감기술 등을 신성장·원천기술 추가 추진('22.1월)

※ [참고] 신성장·원천기술 세제지원 제도

◇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R&D·시설투자시 일반 대비 공제율 우대

① R&D 비용(%)	대	중견	중소	②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2	8	25	일 반	1	3	10	3
신성장·원천기술	20~30		30~40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 (R&D) 235개 신성장·원천기술 중 '온실가스 저감 및 탄소자원화 기술' 13개 (시설투자) 158개 신성장사업화 시설 중 '온실가스 저감~' 관련 시설 10개

- (효과) 예산·세제지원을 통한 탄소중립 기반 확충

③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용을 통한 탄소중립 시책 추진

- (필요성) 중소기업은 탄소중립에 대한 정보, 기술, 자금 등 부족으로 개별적 대응 곤란
- (개선) 중기협동조합을 활용한 공동 R&D, 업종별 홍보·교육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旣마련
 - * 중기협동조합을 활용한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19.7)
 - ** 중소기업 업종별 탄소중립 애로 실태조사('21.11~12), 협동조합 탄소중립 지원 공동사업안 연구용역('21.11~12), 협동조합 중심 탄소중립 저감시설 구축 추진 등
- 아울러, '22년 예산안에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지원을 위한 컨설팅, 융자, 설비투자 등 사업을 확대 반영

※ 중소기업 탄소중립 관련 주요사업

- ▶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신규) : 고탄소배출 업종의 제조 소기업 대상 탄소중립 **컨설팅** 등 지원('22년안 172억원)
- ▶ **넷제로 유망기업 자금** : 그린 유망기술 개발, 저탄소 공정전환 기업 등 대상 시설·운전자금 **융자**('21년: 200억원 → '22년안 1,200억원)
- ▶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신규) :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감축설비 투자 지원**('22년안 54억원)

- (효과) 탄소중립에 대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화

④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필요성) 기술,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필요
- (개선)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21.9월)하여, 기업의 녹색경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旣마련('22.3월 시행예정)
 - 同 법에 따라 녹색산업분야로의 사업전환 지원, 녹색경영(R&D, 사업화 촉진, 기술이전·기술인력 파견 등) 지원이 가능
 - 同 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항을 구체화하고, 선도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 육성체계를 마련하는 특별법 제정 추진 중
 - *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21.1.27 발의, 산중위 계류 중)
- (효과) 중소기업에 대한 탄소중립 지원 활성화

3

기존 산업의 불편 · 애로사항 해소

① 통합허가시스템과 기존 매체 업무의 중복 개선

- (기존) 통합허가 사업장은 배출시설 등 운영 · 관리사항을 통합환경허가시스템과 기존 시스템*에 중복 입력하는 불편
 -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월별) 및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년별)
- (개선) 자료 중복입력 해소를 위한 시스템 개선 추진(~'22년)
 - * 중복자료 추출, 시스템간 연계방법 등 협의 및 시스템 기능개선 필요
- (효과) 통합허가 사업장의 업무부담 완화

② 적산전력계 검침값 입력애로 해소 위한 규제 개선

- (기존) 아날로그 적산전력계 이용 시 현장검침 필요하나, 설비 간 거리가 멀어 모든 설비를 매일 동일한 시간*에 검침 곤란
 - * 대부분 24시간 가동하는 설비 → 24시간 동안 사용한 전력량 측정 위해 매일 동일한 시간에 검침 수행
- (개선) 소규모(45종) 대기배출사업장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시 적산전력계 설치를 면제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 (효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의 검침부담 완화

③ 건물용 연료전지 관련 인증 · 제도 개선

- (기존) 중대형 건물용 연료전지 보급을 위한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 인증 · 제도 미비
 - 중대형 건물용 연료전지 보급 위해서는 10kW 이상 SOFC 적용이 필요하나, KS인증 적용범위는 10kW 이하로 한정
 - 신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제도 안내서에 SOFC 연료전지 보정 계수가 명시되어있지 않음

- (개선) SOFC 등 신규에너지원에 대한 보정계수 마련(~'22上)
- (효과) 국내 SOFC 기술 개발·상용화를 촉진하여 시장잠식 방지 및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4 외국인 근로자 입국확대

- (기존) 코로나 확산으로 외국인력 입국에 차질이 생기면서, 중소기업 등 현장 인력난 지속
 - * E-9 신규 입국인원(명): ('19년) 37,213 → ('20년) 3,650 → ('21.1.1~10.1.) **3,735**
 - E-9 체류 인원(명): ('19.12월) 276,755 → ('21.8월) 218,709 (△**58,046**)
 - 외국인 근로자 입국인원 제한 등으로 금년 전체 쿼터의 1/10수준만 입국*하고 있는 상황
 - * 금년 입국인원(10.1일 기준)은 6,050명으로 금년 쿼터(52천명) 대비 11.6%
- (개선) 입국 전 예방접종 완료, PCR 검사 결과 음성을 전제로 쏘 송출국 대상 입국 허용* 및 입국인원 제한 폐지(11.5.)
 - * (방역강화 대상국가) 입국 전 예방접종 완료 시 사증발급 및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 허용
(기타 국가) 미접종자도 PCR 검사 음성인 경우 입국 허용
 - 3년 또는 4년 10개월 근무 후 귀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 (E-9, H-2)의 체류,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21.12)
 - * 11.1. 기준 총 65천명(E-9 57,744명, H-2 7,561명) 연장
 - 국내 입국 외국인에 대한 방역관리 등을 위해 기숙사 보유 등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사업장 대상 방역점검도 지속 강화
- (효과) 외국인 근로자 입국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IV. 향후 추진계획

□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TF」를 통해 기업 현장애로 해소 지속 추진

-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TF(‘21.1.22 출범)」를 통한 신규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既발표 과제의 이행상황 점검도 지속 추진

< 현장밀착형 규제혁신TF 개요 >

□ 규제 테마별로 명확한 역할분담 + 협업과제는 공동작업

- ① (혁신) 스타트업, 혁신기업 규제·애로 해소 → 혁신성장 옴부즈만
- ② (中企) 중소기업, 중견기업 규제·애로 해소 → 중소기업 옴부즈만
- ③ (지역) 지자체, 지역특구 규제·애로 해소 → 시도지사협의회

- 앞으로도 규제혁신 방안을 순차적 마련 →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등을 통해 확정·발표할 계획

□ 경제단체장 간담회 개최, 기업 현장방문 등 긴밀한 소통 강화

- 부총리-경제5단체장 정례 간담회, 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여 기업의 요구사항 수렴
- 글로벌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등 최근 기업 및 경제계의 당면 이슈와 소비·투자·고용 등 경제지표 흐름을 반영하여 ‘22년도 경제정책방향 수립(12월중 발표 예정)

⇒ 정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귀담아 듣고, 기업은 정부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상호간 이해를 돕고 신뢰 형성 촉진

☞ 기업·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 +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노력

참고1

과제별 추진 일정

정책 과제	추진시기	소관 부처
【신산업 진출 활성화 기반 조성】		
1. 신산업 진출 사업재편 승인기업 금융지원 확대	'22년	산업부, 금융위
2.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 완화	'21.12월	산업부
3. 블록체인 기반 지분거래 플랫폼 서비스 규제 정비 추진	'22년	개인정보위, 금융위
4. 가명정보 활용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22.1분기	개인정보위
【탄소중립 지원】		
1. 국가차원의 저탄소 기술개발 초기 연구지원	'22년~	과기부, 중기부, 산업부
2. 친환경·탄소중립 예산 및 세제지원 확대	'22.1월	기재부
3. 中企협동조합 활용을 통한 탄소중립 시책 추진	'22.上	중기부
4.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22년	환경부, 중기부
【기존 산업의 불편·애로사항 해소】		
1. 통합허가시스템과 기존 매체 업무의 중복 개선	'22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2. 적산전력계 검침값 입력애로 해소 위한 규제 개선	'21.12월	환경부
3. 건물용 연료전지 관련 인증·제도 개선	'22.上	산업부
4. 외국인 근로자 입국확대	'21.11월	고용부, 법무부

참고2

과제별 부처 담당자

과제명	부처명	담당과장	담 당
【신산업 진출 활성화 기반 조성】			
1. 신산업 진출 사업재편 승인기업 금융지원 확대	기재부 미래전략과	최재혁 과장 044-215-4910	김민진 사무관 044-215-4920
	산업부 기업정책팀	박홍일 팀장 044-203-4230	계승모 사무관 044-203-4232
	금융위 산업금융과	김성조 과장 02-2100-2860	박성빈 사무관 02-2100-2864
2.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 완화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이재식 과장 044-203-5360	이송이 사무관 044-203-5366
3. 블록체인 기반 지분거래 플랫폼 서비스 규제 정비 추진	개인정보위 신기술개인정보과	김직동 과장 02-2100-3061	박철 사무관 02-2100-3067
	금융위 전자금융과	김종훈 과장 02-2100-2970	조윤수 사무관 02-2100-2975
4. 가명정보 활용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개인정보위 데이터안전정책과	윤동욱 과장 02-2100-3071	장동철 사무관 02-2100-3076
【탄소중립 지원】			
1. 국가차원의 저탄소 기술 개발 초기 연구지원	과기정통부 원천기술과	이준배 과장 044-202-4540	조민아 사무관 044-202-4516
	과기정통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최준환 과장 044-202-4740	심재환 사무관 044-202-4743
	과기정통부 연구기관지원팀	박병현 팀장 044-202-4750	송호준 사무관 044-202-4751
	중기부 기획총괄과	조희수 과장 044-204-7190	권혁상 서기관 044-204-7191
	산업부 에너지기술과	박태현 과장 044-203-5150	신요한 사무관 044-203-5156
2. 친환경·탄소중립 예산 및 세제지원 확대	기재부 연구개발예산과	정유리 과장 044-215-7370	최병철 사무관 044-215-7378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	박상영 과장 044-215-4320	강효석 사무관 044-215-4132
3. 中소협동조합 활용을 통한 탄소중립 시책 추진	중기부 정책총괄과	김지현 과장 044-204-7402	편장범 사무관 044-204-7423
4.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 TF	이승준 팀장 044-201-6971	최용식 사무관 044-201-6978

과제명	부처명	담당과장	담 당
	중기부 기술정책과	윤세명 과장 044-204-7740	박민지 사무관 044-204-7745
【기존 산업의 불편·애로사항 해소】			
1. 통합허가시스템과 기존 매체 업무의 중복 개선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김호은 과장 044-201-6715	오현희 주무관 044-201-6735
	국립환경과학원 자연환경연구과	서진원 과장 032-560-7594	박재홍 연구사 032-560-7692
2. 적산전력계 검침값 입력 애로 해소 위한 규제 개선	환경부 대기관리과	차은철 과장 044-201-6900	강동균 주무관 044-201-6906
3. 건물용 연료전지 관련 인증·제도 개선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이재식 과장 044-203-5360	하창우 주무관 044-203-5367
	산업부 수소산업과	배준형 과장 044-203-3970	이근모 사무관 044-203-3975
4. 외국인 근로자 입국확대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정해영 과장 044-202-7157	오지영 사무관 044-202-7145